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인정받아

시, 도 대중교통정책추진 '최우수' 선정... '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 에서

전주시가 전북도가 선정한 '2017년 도 대중교통정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15일 부안 모항해나루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교통정책추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올 한해 60여 년만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전면 시행하고, 모심택시·관광택시 운영 등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온 점,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인 이지콜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걸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5년 2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시작으로 완주군과의 시간간격을 전제로 한 노선개편 관련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시민들의 실제교통수요와 변화된 이동패턴에 맞춰 60년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했다.

시는 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참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20개 농촌마을을 어르신들의 발인 맞춤형 모심택시를 하루 60차례 운행, 총 2,57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운행된 15대의 모심택시는 최근 모심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99%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지난 5월에는 2017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일정에 맞춰 3경기 45대의 1994번 특별노선도 운행했다.

나아가, 시는 지난달 1일부터 교통약자들의 광역 이동권 확대를 위해 이지콜 운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2개의 일체형 승강장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동시에, 특별교통수단인 셔틀버스를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외부를 전면 개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

통약자들을 위한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은 지난 10월 실시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에서 전국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전주시내버스와 택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더 이용하기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발이 되고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 기반 조성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에는 '2017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C그룹 1위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동주택 방범교육

전주시에 방범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 지역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강도·절도 등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안전관리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경찰의 역할증대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시는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 매년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및 방범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구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지역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에서 5세 여아 실종... 공개수사 전환

경찰, 고준희(5)양 실종된지 26일만에

전주에서 5세 여아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실종 26일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실종된 고준희(5·시진)양을 찾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경진구 유아동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실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한 고양이의 어머니는 지난 11월 18일 남편과 싸운 후에 외할머니에

맡겨놓은 고양이 없어지자 남편이 데려간 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150여명이 인근 야산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또한 고양이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조사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비슷한 여자 아이를 발견하면 112나 18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이기동·소순명 의원, 감사패 수상

전주시상인연합회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등 공로로

전주시의회 이기동·소순명 의원이 지난 15일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과 소 의원은 평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전통시장 발전을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문화경제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



이기동 의원



소순명 의원

원은 "전주시의회가 지난 2010년 대형마트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

세상인 보호에 앞장섰듯이 앞으로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 도로공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15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한파에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연탄 1만장을 기증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본부장, 노조위원장과 함께 노사합동으로 30여명의 직원이 전주시 송전 2동의 독

거노인이 사는 집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면서 쌀과 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정광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우리가 배달하는 연탄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온기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현금·접대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감독관·부회장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39)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업체 현장감독관인 B(49)씨와 부회장 C(65)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시공업체에게 1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는 등 1년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B씨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진안군에서 발주한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수주 받은 B씨와 C씨는 준공검사·승인, 관리감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지만 뇌물 교부 시기가 횡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인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성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